

## 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비교\*

임현정\*\*, 정영모\*\*\*, 송지훈\*\*\*\*  
ii79hy@gmail.com · st50607@hanmail.net · psu.jihoonsong@gmail.com

### <요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일본의 아동 빈곤대책 사업을 비교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여 사업을 전개한 반면,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연계 하에 아동의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한국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관심을 둔 반면, 일본은 아동의 빈곤을 감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의 운영 차이는 한국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다가 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학생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 전담사는 전체 학교에 미배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학생이 당면한 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어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스쿨소셜워커를 전체 학교에 배치하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복지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교육복지, 빈곤아동 대책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A02061908)

\*\*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연구조교수, 제1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연구조교수,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부교수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교육복지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교육복지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 그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개념이 등장한 1990년대 중반에는 소득불평등이 고조되어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곤층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점차 열악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단위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을 전개하기도 하고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음을 여러 학자들이 증명해 보이기도 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수업태도, 학업효능감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사회성, 자존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김정원, 박인심, 2007; 김경희, 2011; 박미란, 2010; 이봉주, 김혜성, 김광혁, 2008; 정연정, 엄명용, 2009; 류방란 외, 2013; 하대현, 장영은, 2012).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교육부, 2017).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양극화로 인해 교육 투자의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더욱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을 선점한 승자의 독식 구조가 강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교육부, 2017).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아동 증가 우려와 함께 2004년에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부의 협력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그 대처 방식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차이점을 정책추진 배경, 사업 추진 목적, 법적 근거, 운영 주체, 지원 대상, 정책현황 및 주요 성과 측면을 상호 비교하고 향

후 어떻게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한국의 교육복지

### 2.1. 교육복지

한국에서 교육복지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5년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이다. 이 시기 교육복지의 개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건설하겠다는 교육개혁의 의지를 내포하는 것이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류방란 외, 2006).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997년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아, 유아, 학습부진아, 학교 중도탈락자, 해외 귀국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복지 영역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IMF)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 주었던 것이다(류방란 외, 2006). 이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의 기회보장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발생을 막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학문적 의미에서 볼 때 교육복지의 개념은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복지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며, 학자마다 다소 상이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박주호, 2014). 이를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교육복지의 개념 정의와 핵심요소

	교육복지 개념 정의	핵심요소
윤정일 (1990)	교육복지란 교육 소외, 결손집단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학생집단에 대해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궁극적 요구에 부응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실현케 하며, 사회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발전토록 하는 교육서비스와 제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교육취약집단, 모든 국민</li> <li>• 기능: 교육격차, 해소, 개인 자아실현</li> <li>• 지원: 교육활동, 각종 교육 조건</li> </ul>

이돈희 (1999)	교육은 개인의 성장 욕구의 실현이라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복지적 동기를 지니며, 이러한 복지적 동기에 의한 교육기회가 바로 ‘교육복지’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전체 사회구성원</li> <li>• 기능: 교육기회 제공,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li> <li>• 지원: 교육활동</li> </ul>
류방란 외 (2006)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면서 취약집단의 교육적 취약성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불평등을 해소 혹은 완화하려는 사회적인 행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교육 취약집단, 모든 국민</li> <li>• 기능: 교육 불평등 해소, 유의미한 학습경험 제공, 구성원 삶의 질 제고</li> <li>• 지원: 교육활동, 각종 교육 조건</li> </ul>
김인희 (2006)	교육복지는 교육소외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태 또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된 노력의 총체를 의미하며, 교육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하여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교육소의 대상</li> <li>• 기능: 교육 소외 극복, 학습자 삶의 질 향상</li> <li>• 지원: 교육활동, 각종 교육 조건</li> </ul>
정영수 (2009)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교육적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모든 국민</li> <li>• 기능: 교육기회 제공, 삶의 질 제고</li> <li>• 지원: 교육활동, 각종 활동</li> </ul>
임혜숙 송노원 (2010)	교육복지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으로 누리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쳐는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교육소의 대상, 모든 국민</li> <li>• 기능: 교육 불평등 해소,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li> <li>• 지원: 교육활동 등 각종 활동</li> </ul>

출처: 박주호(2014)의 p.9-10 <표1-4> 문헌에서 규정된 교육복지의 개념 정의와 핵심요소를 재구성

위와 같이 교육복지를 다양하게 정의하는 것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접근 방법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교육 그 자체가 바로 복지적 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복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김인희, 2006; 성기선 외, 2009). 다음으로는 교육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혜영, 2002; 홍봉선, 2004).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류방란 외, 2006). 결국 실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교육복지를 누가 담당하며, 그 실행 주체는 누구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교육복

지 담당자가 교육복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박주호, 2014).

교육복지의 개념 정의는 그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안병영, 김인회, 2009). 교육복지를 광의적 또는 협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이용교, 임형택, 2010), 이용교와 임형택(2010)에 의하면 협의적 측면에서 교육복지는 교육소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소의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광의적 측면에서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 2.2.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교육복지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5년 5·31교육개혁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복지정책이 실현된 것은 2004년 참여정부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에 ‘참여정부 교육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국민기초 교육수준 보장, 교육부적응 해소,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와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복지 정책계획과 교육안전망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저소득밀집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실행한 점은 특징적이다. 그 밖에도 방과후학교사업, 지역아동센터, 희망스타트, CYS-Net,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복지관련 사업이 시행되었다(박주호, 2014).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교육복지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학력 수준 향상과 교육격차 완화, 가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 선진화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보장,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하였다(박주호, 2014).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창의 경영학교, Wee프로젝트, 농산어촌·전원학교 사업 등도 이 시기에 추진된 정책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꿈과 끼

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라는 교육복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2017년 3월에는 교육부에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교육부, 2017).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슬로건을 표방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목표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을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와 같이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기회균등을 위해 저소득밀집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및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계층과 가정배경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장창수, 김대원, 양혜진, 20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된 교육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통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장창수, 김대원, 양혜진, 20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본래 명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었지만 사업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시작한 2003년에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지역 단위로 운영했던 사업을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확대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에 도시중심에서 전개되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의 시행주체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초·중·고교육법시행령 제54조와 교육부 훈령 제106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사업의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자녀, 담임추천 학생(위기 및 결손가정, 학교부적응학생 등)이다.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상담하며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교사, 외부인사(학부모 포함) 등도 사업에 관여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정지원의 한계로 인해 모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없는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다(이전이 외, 2017).

본 사업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사업학교와 대상 학생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전체학교 수가 2017년 3,301교로 초등학교 54.5%, 중학교 39.1%, 고등학교 6.4% 순이며, 유치원의 경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실시 하고 있다. <표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전체학교 수가 2014년 1,828교에 비해 2017년 3,301교로 55.4%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3.7배, 초등학교 2배, 중학교 1.5배순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현황(2003년도-2017년도) (단위: 개)

연도	유	학교				계
		초	중	고	소계	
2017	160	1,799	1,290	212	3,301	3,461
2014	193	903	860	65	1,828	2,021
2013	244	894	876	63	1,833	2,077
2012	257	906	831	64	1,801	2,058
2011	188	670	681	5	1,356	1,544

2010	297	296	234	4	534	831
2009	375	300	234	4	538	913
2008	196	187	132	3	322	518
2007	195	187	132	3	322	517
2006	97	103	61	3	167	264
2005	66	50	32	-	82	148
2003	34	29	16	-	45	79

\* 2017.10월 기준

출처: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20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의 학생 구성 현황은 다음 <표 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전체 학교의 학생 수 대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 전체 학생 수의 비율은 42.6%이며, 중학교 52.3%, 초등학교 37.4%이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생구성은 교육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순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박주호, 정영모, 이현주, 2016).

사업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자존감 및 학업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기대를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정원, 박인심, 2007; 성열관, 백병부, 윤경희, 2008; 이봉주, 김혜성, 김광혁, 2008; 정연정, 엄명용, 2009; 김혜래, 최승희, 조성우, 2011; 김광혁,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영역에 해당되는 인지적 측면에서는 학업성취도에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에게는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 증진이 발견되었으며(이봉주, 문혜진, 김정은, 2014), 중학생에게는 영어(김근진, 2016; 연보라, 임혜정, 김희나, 2014; 한유경, 2013)와 수학(김근진, 2016; 이봉주, 문혜진, 김정은, 2014)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교육복지 사업지원 학생이 지원학생이 아닌 학생에 비해 주도적 학습몰입에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박주호, 김종민, 신인수, 이현주, 2016). 심리·정서영역에 해당되는 정의적 측면에서는 주로 학교생활 적응과 태도, 자존감,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또래관계, 학교만족도, 문제행동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근진, 2016; 김정원, 박인심, 2007; 김정원 외, 2009; 류방란 외, 2012; 박미란, 2010; 이봉주 외, 2008; 이해영 외, 2005; 정연정, 엄명용, 2009; 하대현, 장영은, 2012).

<표3> 20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추진 현황(초, 중) (단위: 천명, %)

시도	전체학교학생수(A)			교복우학교전체학생수(B) (연계학교포함)			비율(B/A)		
	초	중	소계	초	중	소계	초	중	소계
전체	2,657	1,415	4,072	993	741	1,734	37.4	52.3	42.6
서울	435	239	674	325	214	539	74.9	89.3	80.0
부산	151	87	237	86	69	155	57.4	79.4	65.4
대구	125	69	194	120	67	187	96.2	97.8	96.8
인천	155	83	237	91	69	159	58.6	83.2	67.2
광주	89	52	141	87	51	138	97.3	99.3	98.1
대전	76	48	123	12	11	23	15.9	22.7	18.5
울산	66	33	99	11	10	20	15.9	29.0	20.3
세종	19	8	26	3	2	4	13.6	22.3	16.1
경기	724	382	1,106	58	55	113	8.0	14.5	10.2
강원	78	44	122	25	27	52	31.9	61.9	42.7
충북	84	46	130	19	21	41	22.9	46.0	31.1
충남	115	30	146	17	20	37	14.8	65.7	25.3
전북	97	57	154	67	51	118	69.1	88.8	76.4
전남	93	53	146	17	19	36	18.3	35.4	24.5
경북	128	70	198	23	30	53	18.1	42.4	26.8
경남	186	93	279	27	20	48	14.8	21.8	17.1
제주	38	21	59	5	5	10	37.4	25.0	17.2

\* 2016. 7월 기준

\* 법정저소득가정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법정한부모가정 자녀수+차상위 계층 자녀수

출처: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2017)

### 3. 일본의 교육복지정책

#### 3.1. 일본의 교육복지

2000년대 후반에 발간된 빈곤연구에 관한 『子どもの貧困白書』(2009)를 보면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중반부터 빈곤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언론들도 동 기간 동안에 다양한 보도를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의 ‘무보험 아동문제’와 ‘취학지원’에 대한 격차를 보도함으로써 아동복지에 대한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아동 빈곤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빈곤아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후생노동성은 2009년 10월에 일본의 빈곤율을 공표하였다(厚生労働省, 2009). 후생노동성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일

본의 빈곤율은 16%이며 이 가운데 17세 이하의 아동의 빈곤율이 15.7%로 나타났으며, 빈곤율과 아동 빈곤율이 함께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 취학원조를 받은 아동과 학생은 총 155만 명으로 공립 초중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자료들은 2004년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빈곤아동 대책 추진 법)’의 시행의 근거가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아동복지법(1947년 제정), 엔젤플랜(1994년 시행), 신엔젤플랜(2000년 시행) 등과 차별되는 점은 모든 아동이 출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교육 평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간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 복지의 관점을 아우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16%로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5위로서 하위권에 속해 있었으며, 문부과학성 조사(2013)에 의하면 생활보호 수급가정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2년 98.6%에서 2013년 90.8%로 감소하였고, 전국학력조사(国立教育政策研究所, 2013)에서도 생활보호 수급가정 아동은 일반 가정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아동성장의 가변 변수로 작용하는 환경을 재정비하고 학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른바, 일본의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빈곤의 세습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2014년 ‘아동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골자’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였다. 동 법률은 중앙정부 및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하며, 당해 대책들은 일본 내각부(内閣府) 정책총괄관을 중심으로 정책 비전과 목표, 정책의 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정부와 지방의 개혁이 일체형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도 각 도도부현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사례는 내각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또한 내각부에서는 2015년 10월 ‘아동의 미래응원국민운동’을 실시하고 동 년 12월 ‘아동의 빈곤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아동의 안심과 희망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이 전개되었다.

### 3.2. 일본의 교육복지정책

2014년 빈곤아동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어 동 법 8조 1항에 근거하여 아동 빈

곤대책에 관한 골자가 추진되었다. 아동 빈곤에 관한 골자는 아동의 미래가 태어난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빈곤의 연쇄를 방지하고, 필요한 환경정비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지원하는 아동의 빈곤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이다. 빈곤아동 대책 추진법에 관한 골자는 <표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교육 및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제시되었다.

<표4>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골자

① 교육지원	취학 지원, 학자금 지원, 학습의 지원 등
② 생활지원	빈곤 상황에 있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생활에 관한 상담, 사회적 교류의 기회 제공 등
③ 보호자에 대한 취업지원	빈곤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 실시, 취업 알선 등
④ 경제적 지원	각종의 수당 등의 지급, 용자금 지원 등

출처: 湯沢(2013) 재구성

빈곤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은 ‘아동의 빈곤 대책에 관한 골자’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기관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아동의 빈곤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학교기관을 창구로 복지관련 기관, NPO, 자치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학습 및 생활에 대해 지원한다. 당해 체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스쿨소셜워커’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교토부(京都府, 2015)에서는 전 학교에 스쿨소셜워커를 배치하고 있다. 둘째, 빈곤의 연쇄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교육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취학지원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에 대한 충실한 취학지원을 위해 고등학생 장학제도 등을 통해 빈곤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교토부에서는 빈곤아동에게 문부과학성에서 지원하는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외에 ‘고등학생수학지원금’을 활용하여 ‘사립 고등학교 안심 수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업료 면제를 추진하여 고교 중퇴율 감소(2008년 4.0%에서 2013년 1.3%)의 성과를 이루었다. 넷째, 대학진학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빈곤아동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공사립 대학생과·전문학교 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섯째 생활궁핍세대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구마모토현(熊本県, 2015)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학습지원은 민간단체, NPO,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퇴직한 교원 및 지역주민, 대학생

의 자원봉사로 빈곤 가정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를 하는 사업이다. 여섯번째 그 외의 교육지원으로 학생의 네트워크 구축, 야간 중학교 설치 촉진, 아동의 식생활과 영양상태 관리,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의 빈곤아동 대책 추진 법은 아동의 장래가 태어난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계 각료가 대책회의를 하여 빈곤대책에 관한 골자를 의무화시켰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아동의 빈곤대책 회의’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성청간 적극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 시책에 관해서는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 확충, 영유아기부터의 조기대응, 빈곤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학부모의 취업지원, 아동의 빈곤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등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빈곤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효과는 <표5>와 같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빈곤아동 대책 추진법 골자에 관한 정책을 실시한 직후 대부분의 정책시표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빈곤아동 대책 추진법이 시행되기 전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16.3%였으나 사업 시행 후의 아동 빈곤율은 16.1%로 다소 감소되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빈곤아동이 처한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스쿨소셜워커 및 스쿨상담사의 배치 수는 본 사업 직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5>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성과

정책지표	빈곤아동		전 세대 수 (정책실시 후)
	정책실시 직전	정책실시 후	
생활보호 대상자 고등학교 진학률	90.8	<b>92.8</b>	98.8
생활보호 대상자 고등학교 중퇴율	5.3	<b>4.5</b>	1.5
생활보호 대상자 대학 등 진학률	32.9	<b>33.4</b>	73.2
한부모가정의 보호자 취업율	모자 가정	80.6	64.4
	부자 가정	91.3	81.6
스쿨소셜워커 배치 수	1,008명	<b>1,399명</b>	
스쿨상담사 배치율	초등학교	37.6	
	중학교	82.4	
아동의 빈곤율	16.3	<b>16.3</b>	16.1

출처: 内閣府(2016) 「子供の貧困対策」

#### 4. 한국과 일본의 교육복지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배경, 법적 근거, 목적 및 목표, 운영 주체, 대상, 정책현황, 정책성과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적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일본의 아동의 빈곤대책 골자를 비교하였다.

추진배경 및 목적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의 불평등 및 교육 기회보장을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발생을 막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적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취업 지원을 중시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일과 보육의 양립, 경제적인 문제 등 한부모가정이 처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여 생활지원 및 취업지원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정책의 법적 근거 측면에서는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협력을 통해 발의 된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 및 골자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생활지원, 부모의 취업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전개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행정 및 교육행정, 노동행정 등 유기적인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 운영주체는 한국의 경우 초중고 단위학교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 일선교사,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일본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내각부에서는 아동의 빈곤 대책회의를 설치하였으며 회의의 회장은 내각총리이며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그 외 관계 행정기관이 아동의 빈곤 대책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47개 도도부현은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 계획 세우는 것에 의무화되고 있다. 빈곤아동의 학력보장에 있어서는 일선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의 관련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지원을 중시하고 있다. 아동의 학습지원의 시행은 생활보호자 자립지원법과 연동되어 최근에는 후생노동성의 행정으로 학습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동향과 함께 각 지역에서는 시민과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무상의 공부방(学習塾)이 확대되고 있다.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취약계층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 차상위 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위기 및 결손가정, 학교 부적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위기 및 결손가정, 학교부적응 학생

등 대상자의 선정 기준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정책현황 및 성과에 있어서 한국은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사업의 내용의 체계화 및 사업 내용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를 기반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로는 학생들의 자존감 및 학업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기대를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실시되면서 지속적인 사업의 성과에 대한 확인과 사업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확대와 발전, 체계화 등의 성과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골자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중앙단위에서 개발하여 내각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47개 도도부현 또한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 계획에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2012년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성과지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각 도도부현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나 중앙단위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한국과 일본의 교육복지정책 비교

구분	한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일본 (아동의 빈곤대책 사업)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불평등 및 기회보장</li> <li>• 빈곤의 대물림 현상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불평등 및 기회보장</li> <li>• 빈곤의 대물림 현상 방지</li> </ul>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소관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소관으로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 제정</li> </ul>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도교육청</li> <li>• 초중고 단위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7개 도도부현</li> <li>• 47개 도도부현은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 계획 의무화</li> <li>• 초중고 단위학교</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li>•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차상위 계층</li> <li>•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li> <li>• 위기 및 결손가정, 학교부적응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부모</li> <li>• 취약계층의 전 아동</li> </ul>

<p>정책현황 및 정책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초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완성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다수</li> <li>• 사업중기에는 사업 내용의 체계화 및 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다수</li> <li>• 사업후기에는 사업 성격의 변화와 재구조화 및 성과 검증 필요성 제기</li> <li>•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li> <li>• 17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성과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단위에서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li> <li>• 47개 시도부현에서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 계획에 성과지표 관리 및 효과 검증</li> <li>• 사업 직후 아동의 빈곤율이 다소 감소</li> <li>• 스쿨소셜워커 및 스쿨상담사의 배치 현황 증가</li> </ul>
--------------------	--	---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일본의 아동 빈곤대책 사업을 비교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몇 가지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여 사업을 전개한 반면,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 그 자체가 바로 복지적 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복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김인희, 2006; 성기선 외, 2009)에서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공동의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관심을 둔 반면, 일본은 아동의 빈곤율 감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운영상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것에 주목하여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관리하여 학생이 당면한 빈곤 문제를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대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빈곤아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일본은 빈곤아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 교육격차 해소인지, 아동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있는지, 학교적응능력 향상에 있는지 등 정책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 분명할 때 이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빈곤을 분명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달성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 교토의 경우 전 학교에 스쿨소셜워커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되었으나 교육복지사 등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전문성 높은 교육복지사를 단위학교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당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Reference) ▶

- 교육부(2017),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보도자료(2017.03.08.).
-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지역교육협의회 자료집.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 교육개혁위원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7월.
- 강혜정(2017),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Crisisonomy』, 13(2): 1-16.
- 김광혁(2012),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분석: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 발표 논문집. 2012, 143-165.
- 김경희(201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분석」, 『교육연구논총』, 32. 1-21.
- 김근진(2016),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평균효과 및 분위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2), 119-146.
- 김인희(2006),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의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4(3), 289-314.
- 김정원·김성식·박인심·김도희·김기범·김경애·이은미(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종단 효과 분석 연구(1차년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박인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 분석」, 『한국교육』, 34(4), 131-154.
- 김혜래·최승희·조성우(2011),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성과척도 개발 연구」, 『학교사회복지』, 21, 1-29.
- 류방란·이혜영·김미란·김성식(2006),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분석-교육복지지표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김준엽·송혜정·김진경·김도희(2012),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 연구(3차년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김준엽, 송혜정, 김진경(2013), 「자존감 향상, 우울 불안 감소에 미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3), pp.59-83.
- 박미란(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18, 129-157.
- 박주호(2014), 『교육복지의 논의: 쟁점, 과제 및 전망』, 박영story.
- 박주호·정영모, 이현주(2016),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서울: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박주호·김종민·신인수·이현주(2016), 「교육복지성과 패널모형 구축 연구(2차년도)」, 서울: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성열관·백병부·윤경희(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집중지원 효과 연구」, 『한국교육』, 35(3), 23-46.
- 성기선·박철희·양길석·류방란(2009), 「농산어촌 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복지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 2009-11.
- 안병영·김인희(2009), 『교육복지정책론』, 다산출판사.
- 윤정일(1990), 「21세기사회의 교육복지정책」, 교육이론, 5(1), 121-146.
- 이돈희(1999), 『교육정의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봉주·문혜진·김정은(201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학업성취 효과 종단적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5, 161-190.
- 이봉주·김혜성·김광혁(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분석: 참여학교와 비 참여 학교 아동의 발달에 대한 종단적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9(3), 169-195.
- 이용교·임형택(2010), 『교육복지론』, 서울: 집문당.
- 이전이·박주호·송지훈·유기웅·이지영·임현정(2017), 「교육복지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담당자의 교육요구도 분석」, 『학교사회복지』, 37, 205-226.
- 이혜영(2002), 「교육복지정책. 한국교육개발원 편. 2002 한국교육평론: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53-269.
- 이혜영·류방란·김정원·장명림·구리나(200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RR2005-4.
- 임혜숙·송노원(2010), 「소외계층 영재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 분석」, 『21세기사회복지연구』, 7(1), 219-242.
- 연보라·임혜정·김희나(2014),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초등학생의 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학교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4(4), 125-150.
- 정영수(2009),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16(3), 31-52.
- 정연정·엄명용(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4), 5-33.
- 장창수·김대원·양혜진(2015), 「대전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2017), 「20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도교육청 현황 분석」,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시도협의회 자료.
- 하대현·장영은(201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의 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지능, 정서기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6(1), 85-101.
- 한유경(2013),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효과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봉선(2004),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1), 253-282.
- 內閣府(2016), 『子供の貧困対策』<http://www8.cao.go.jp/kodomonohinkon/index.html> (2018년6월7日檢索)
- 京都府(2015), 『子供の貧困対策の推進について』
- 熊本県(2015), 『くまもと子ども,子育てプランの策定について』[http://www.pref.kumamoto.jp/kiji\\_10297.html](http://www.pref.kumamoto.jp/kiji_10297.html) (2018년6월7日檢索)
- 子どもの貧困白書編集委員会(2009), 『子どもの貧困白書』明石書店
- 厚生労働省(2009), 『貧困率の状況』<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10/2-7.html> (2018년6월7日檢索)
- 国立教育政策研究所(2013), 『平成25年度全国学力学習状況調査の結果について』<http://www.nier.go.jp/13chousakekkahoukoku/> (2018년6월7日檢索)
- 湯澤直美(2013), 「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制定経緯と今後の課題」 『貧困研究』 Vol. 11.

<ABSTRACT>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education-welfare policy for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between Korea and Japan**

Lim Hyun Jung (Hanyang Univ.)

Jeong Yeong Mo (Hanyang Univ.)

Song Ji Hoon (Hanyang Univ.)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compare the governmental-level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by focusing on the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Especially, we compared the Korean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olicy and child poverty reduction projec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have focused on children affected by poverty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0s; since then both governments have actively engaged in support to solve the issues in both countries. In Korea,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the secondary education law and enacted instructions for active welfare support; in Japan,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ST) have promote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overty Reduction. The difference in the 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at, in Korea, the project initially centered on areas in which poverty prevailed, but is now being operated based on each school and educational welfare specialists have not been placed in all schools. However, Japan not only focuses on students affected by poverty but also on the family and social issues responsible for causing the poverty. In addition, government clarifies the policy objectives of deploying school social workers in every school nationwide. Since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a comparison of the respective policies of these two countries may not be meaningful, because the applicabl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in Korea were derived on the basis of cases in Japan.

**Key words : educational welfare, child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education welfare priority program**

- 투 고 : 2018. 06. 30.
- 심 사 : 2018. 07. 15.
- 심사완료 : 2018. 07. 30.